

민주-국민의힘 대선 경쟁 전면전 돌입

여야 선대위 구성 마무리 이재명-윤석열 초박빙 접전 12월 한달이 초반 판세 좌우

국민의힘이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을 원톱으로 선대위 전열을 재정비하면서 본격적인 대선 경쟁전이 가시화되고 있다. 특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의 지지율도 거의 접전 양상을 보이면서 12월 한 달 동안 양당은 대선 초반 우세를 점하기 위해 총력전을 펼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새해 첫날 발표되는 각 언론사의 여론조사 결과에 따라 대선 초반 판세가 결정지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통합하고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의 '원톱' 총괄선대위원장 합류를 끌어낸 국민의힘 윤석열 선대위를 향해 "일회용 반창고 선대위"라며 집중 포화를 쏟아냈다. 그러나 당 내부적으로는 국민의힘이 진통 끝에 '여의도 차르', '킴메이커'로 불리는 김종인 전 위원장의 합류를 확정, 원톱 선대위 진용을 완성한 데 대한 경계와 긴장의 분위기도 감지된다.

간문제"라며 "땀질 형 미봉 선대위가 원만히 가동될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내부적으로는 경계와 긴장의 분위기 감지된다. 민주당의 한 인사는 "김종인, 이준석을 잘 모르면서 당내에는 '근자감' (근거없는 자신감)이 있는 것 같다"면서 "우리가 굉장히 경계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세에서 벗어나 적극적인 민심 공략에 나서고 있다. 우선 국민의힘 총괄선대위원장을 맡은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은 5일 선대위 합류일선(一線)으로 '코로나로 인한 양극화 해소'와 '경제구조 전환'을 내세웠다. 또 서민에게 와 닿을 수 있는 정책 개발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다음 대통령이 될 사람이 가장 중요시 해야 할 과제"라고 지적했다. 정치권에서는 '김종인표 경제민주화' 2탄 나오지 않느냐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그동안 대선 후보로서 구체적인 비전 제시가 없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윤 후보가 본격적으로 정책 공약을 내놓지 않느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선대위 합류가 확정됐다. 또 '김종인 사단'이 속속 선대위에 합류하고 있다. 우선, 총괄상황본부장에 임태희 전 청와대 비서실장을 임명했다. 20-30세대의 지지가 높은 노재승 블랙위터포스트 대표와 박주선 전 국회의원장을 공동선대위원장으로 영입했다. 여기에 추가 합류가 예상되는 후보군으로는 중도적 인사로 꼽히는 권경에 변호사와 김경을 회계사를 비롯, 윤희숙 전 국민의힘 의원, 정태근 전 의원, 김근식 경남대 교수 등이 거론된다.

국민의힘 내홍 봉합...김종인·이준석 '원톱' 선대위

'반문 빅텐트론' 속도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내홍을 극적으로 수습하고 오는 6일 '원톱' 선대위를 공식 출범할 준비를 마쳤다. 한때 결별의 강을 건너는 듯했던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의 극적 합류를 견인하고 이준석 대표의 손을 다시 잡아 '원톱'을 성공적으로 구축한 윤 후보가 지지율을 반등시킬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일단 당 안팎에서는 윤 후보가 '울산 담판'을 통해 정치신인의 꼬리표를 떼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선대위 핵심 관계자는 5일 "검찰총장 윤석열이 대권주자 윤석열로 완벽히 변신했다"고 강조했다. 윤 후보와 정면충돌 끝에 화해한 이 대표도 이날 페이스북에서 "국민은 이런 어려운 정치적 조정을 해낸 윤석열 후보의 정치력을 높게 평가할 것"이라고 치켜세웠다.



국민의힘 총괄선대위원장을 수락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당사를 방문, 윤석열 대선 후보를 만나고 있다. /연합뉴스

주요관계자도 했다. 먼저 김 전 위원장은 비서실 격인 총괄상황본부를 통해 선대위를 실질적으로 지휘하면서 중도·진보층에 소구하는 '김종인 표' 메시지를 쏟아낼 것으로 보인다. 또 이 대표는 전날 윤 후보와 커피를 후드티를 입고 부산에서 공동 유세를 벌인 것처럼 2030 젊은 감성의 선거운동으로 흥행을 책임질 기세다. 인터넷 포털 댓글 조작을 감시하는 '크랙맨', 이 대표가 직접 운전해 전국을 누비는 신개념

유세차 '청소차', 가상의 윤 후보 영상을 만드는 'AI 윤석열'에 이어 호남 지역에 윤 후보의 '손편지'를 뿌리는 아이디어를 몰입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선대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윤 후보의 시대 비전에 숨죽이고 있던 호남도 반응하고 있다. 이번 대선에서 호남 지지율이 20%를 넘을 수 있다"며 "앞으로 대선일까지 확실한 지지율 격차가 유지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이제는 윤 후보가 이런 갈등 조정 실력을 보인 데 이어 한동안 답보 상태에 빠져있던 지지율을 다시 끌어올릴 수 있느냐로 관심이 쏠린다. 지난주 김 전 위원장 영입 불발과 이 대표 공백 사태, 이에 따른 선대위 구성 난항으로 일부 여론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에게 역전을 허용한 터였다. 윤 후보 측은 6일 공식 출범 이후 선대위가 유기적으로 돌아가면 자연스럽게 유권자들의 불안이 해소되고 지지기반이 확대돼 윤 후보의 지지율 우위로 더 확고해질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윤 후보는 이날 오후 당사에서 총괄선대위원장직을 수락한 김 전 비대위원장과 1시간 가량 비공개로 만나 대선 여젠다, 공약 개발에 대한 의견을

심상정-안철수 오늘 회동 '제3지대 공조' 시동

정의당 심상정 대선 후보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6일 만나 '제3지대 공조'에 시동을 건다. 양당체제 종식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후보들과

얼마나 공조할 수 있다는 입장으로,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등으로 공조 범위가 넓어질지 주목된다. 5일 정의당과 국민의당에 따르면 양당 후보는 6

일 오후 2시께 국회 밖 모처에서 회동하기로 하고 세부적인 의제를 협의 중이다. 큰 틀에서는 ▲양당 체제 종식을 위한 정치개혁 과제 ▲거대 양당 후보들이 얽혀있는 '쌍특검' (대장동·고발사주 의혹특검) 도입 ▲대선 정책공조 등이 테이블에 오를 가능성이 크다. /연합뉴스

제주 찾은 이낙연 "대선, 책임 의식 맞게 활동"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주자였던 이낙연 전 대표는 지난 3일 제주를 찾아 "(대선에서) 책임 의식에 맞게 활동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전 대표는 "경선 이후에 3~4주 동안 집거 상태에 있었고, 지금은 조용히 여러 지역의 저를 도와주셨던 분들께 인사드리는 일정을 하고 있다"며 "제주 방문도 그런 일정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재명) 후보 측의 요청을 수락해 선대위 상임고문으로 이기 합류해 있다"며 "책임 의식에 맞게 활동할 것이고, 지금까지 그러지 않은 적은 없었다"고 말했다. 이 전 대표는 이재명 대선후보 선대위의 '1호 영

입인제'로 발탁됐다 사퇴 의사를 밝힌 조동연 공동 상임선대위원장에 대해서는 안타까움을 표명하기도 했다. 이 전 대표는 "(조 위원장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좀 더 신중하게, 국민들께 염려를 끼쳐 드리지 않도록 잘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제주 4·3 평화공원을 찾아 참배했다. 그는 "제주4·3특별법 개정이 순조롭게 진행돼 다행"이라며 "보상의 규모와 방식에 대해서 유족들이 한 마음으로 수용해 주셔서 보상의 실행 또한 큰 어려움 없이 진행될 수 있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민간 공동개발사업'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법 개정안 국토소위 통과

민간 공동 도시개발사업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해 이른바 '대장동 사태'처럼 천문학적인 수익이 민간으로 흘러가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첫 입법문턱을 넘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2일 법안소위원회를 열고 주택법 개정안을 여야 간 이견 없이 의결했다. 이른바 '대장동 방지법'으로 불리는 '개발이익 환수법 3법' 중 하나다. 공공 참여 도시개발 사업에 대해서도 분양가 상한제를 통해 민간 사업자 수익의 상한을 정하는 내용이다. 현재 도시개발법에서는 민간관동으로 설립된 법인(SPC·특수목적회사)이 조성한 택지는 민간택지로 분류돼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앞서 대장동 개발사업에서는 성남도시개발공사가 '50%+1주'의 지분으로 사업에 참여했지만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이 아니었다. 이처럼 공공이 지분의 절반 이상을 보유했다는 이유로 공공택지 개발 때 발생하는 토지거래 수수권까지 주어지는 과도한 혜택을 없애겠다는 것이다. /연합뉴스

여야는 도시개발법 개정안도 법안소위에 상정해 의결했다. 도시개발법 개정안은 민간 합작 도시개발사업에 민간 이윤율을 한정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이와 관련, 민간 이윤율을 어느 정도로 어떻게 제한할지를 두고 여야 간 의견이 다소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민간 공동출자법의 민간 출자지분을 50%로 제한하자고 했지만, 국민의힘 측은 "개발사업에서 민간 지분을 50%로 제한하는 것은 사업을 위축시킨다"며 반발했다. 논의 끝에 여야는 민간사의 이윤 제한을 법안에 명시하지 않고 시행령에 두도록 조치한 뒤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국토위는 6일 전체회의를 열고 두 법안을 의결할 방침이다. '대장동 방지법' 중 여야 간 이견이 가장 첨예했던 개발이익환수법은 소위에 상정되지 않은 상태다. 개발이익환수법 개정안은 민간의 개정안은 개발부담금 부담률을 40~50%로 올리는 내용이 핵심이다. 이 법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강하게 주장하고 있지만, 야당의 반발이 거세 지난 달 22일 소위 상정 여부를 둘러싸고 국토위 파행까지 빚은 바 있다. /연합뉴스

광주보청기 난청센터

보청기

무료체험

직접 체험 후 결정!!

☑️ **잡음없이 깨끗한 소리**

☑️ **윙윙~ 울리지 않는 보청기**

062)362-3336

광주 동구 대인동 183-2번지 (한미쇼핑사거리)

상가매매 (상무지구)	장성 토지(매매 분양)
<p>6, 7층 (140평)분양[중심상업지구]</p> <p>감정가(시세) -> 9억</p> <p>급매가 -> 5억8천</p> <p>(보 3천 월 300, 용 3억5천)</p> <p>1) 6층(80평 분양) 감정가(시세) -> 6억</p> <p>(보2천,월200) 급매가 -> 4억 5천</p> <p>2) 7층(60평 분양) 감정가(시세) -> 4억</p> <p>(보1천,월100) 급매가 -> 2억 5천</p> <p>(사무실 리모델링함, 빠, 유희, 모든업종가능 즉시입주 시비없음)</p> <p>010-6670-9800</p>	<p>광주에서 20분(6M도로접)</p> <p>장성댐 (호) 2분,</p> <p>장성 IC. 5분</p> <p>총 1760평</p> <p>(150평, 200평, 500평, 분할가능)</p> <p>[전원주택,물류창고,주말농장,별장,투자적합]</p> <p>010-6670-9800</p>